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191개사 중 광주 23·전남 1개 뿐

최근 5년 간, 수도권 규제완화로 더욱 어려워

수도권 기업들의 '광주·전남지역 이전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지역에 첨단산업을 비롯한 공장의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지역 경제의 파국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지식경제부와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비수도권인 13개 시·도에 이전한 기업은 모두 191개사로, 이 중 광주에는 12%인 23개사, 전남에는 1개사가 이전하는데 그쳤다.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53개(27.7%)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고, 다음으로 충남 52개(27.2%), 전북 36개(18.8%), 충북 24개(12.6%)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2004년 1개, 2005년 7개, 2006년 9개, 2007년 5개, 2008년 1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왔다. 이들 기업은 광산업 등 대부분 첨단업

종 관련업체로서, 광주시의 관련 산업 육성에 따라 이전해 온 경우였다. 전남으로는 지난 2006년 친환경 농산물 제조업체인 대선제분 단 1개업체만이 이전해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 등을 토대로 한 중앙정부의 기업지방 이전지원금도 전체 1천183억2천만 원 가운데 광주는 1.74%인 20억6000만 원에 그쳤고, 전남은 지난 2006년 단 한차례 14억 원(1%)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지원액 규모별로는 충남이 34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 283억 원, 강원 207억5천만 원, 전북 197억 원 등이었다. 광주는 8위에 그쳤고, 전남은 10위였다.

수도권 기업들이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이전을 꺼리는 것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우수 인력 및 기술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4월 수도권 정

비계획법을 개정하고, 6월 수도권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으로 수도권 기업이 스스로 이전하길 바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안"이라며 "이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기존 이전 업체들은 물론 지역 이전 예정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제=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대해 해당지역 지자체가 지원할 보조금 총액 중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 규모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빨갛게 노랗게 무르익은 가을

1~2일 '제13회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열린 장성 백양사에는 관광객들이 붐볐다. 물든 애기단풍 터널을 걸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배대위 5층
☎062-973-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973-5100

과김치된 '김치의 고장'

중국산 수입 급증·수요는 줄어 광주·전남 업체들 경영난 심각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수출길도 막혀 너무 힘들다. 게다가 올해 전남산 김장배추가 풍작이어서 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중국산 김치과동 이전까지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광주 Y김치생산업체 K대표의 하소연이다.

K대표는 "일반 음식점에 납품되는 김치의 경우 70~80%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산이 10kg에 9천원인 반면 국내산은 3만4천원대로 4배에 달해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올해 전남산 김장배추가 풍작을 보이면서 광주·전남지역 김치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중국산 수입 김치 과동 이후 올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배추김치 제조·가공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김치업체 등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이 지역 김치수입액은 103만4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6%(26만달러)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는 이미 지난해 11월까지의 누계 101만8천달러를 웃돌고 있다. 월별 수입액은 1월 11만4천달러, 2월 12만7천달러, 3월 15만1천달러, 4월 12만달러, 5월 13만6천달러, 6월 11만2천달러, 7월 6만8천달러, 8월 9만9천달러, 9월 10만7천달러 등이었다.

이에 따라 30여개에 달하는 영세한 지역내 김치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 김치 제조업체 수는 3~4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K대표는 "한때 일본에만 연간 6억~7억원의 김치를 수출했으나, 최근 수출길이 막혀 계속 문을 열어야 할 지 고민중"이라며 "홍소핑을 통해 1년 묵은 김치를 판매, 10명으로 줄어든 직원들의 월급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년 예산 확보 사활 걸었다

광주시·전남도 정책간담회 등 활발

18대 국회 첫 예산심사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3~7일)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인 10일경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본격화되며 각 지자체는 미리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각 지자체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로

비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박광태 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지역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요청사항을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요청을 한데 이어 두 번째 공식적인 자리였다. 박 시장은 또 이 간담회를 전후로 2~3일간 서울에서 머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예

산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길에 이한구 예결위위원장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지역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최인기, 조용택, 이용섭, 이윤석 의원 등 광주·전남 출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했다.

이같은 예산 확보 경쟁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펴고 있어 정치권의 역할이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건환경연구 "중국산 천일염 몸에 해롭다"

중국산 천일염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과 국내에서 유통중인 중국산 천일염 7건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2건이 국내 성분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검사는 것벌 등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인 '불용분'과 모래 등의 '사분', 비소, 납, 카드뮴, 수은, 페리시안화이온 등 7개 항목에 걸쳐 실시했다.

성분 검사 결과, 1건에서 불용분이 0.16%로 기준치(0.15%)를 넘었

으며 사분도 0.24%로 기준치(0.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건도 불용분이 0.16%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중금속 성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산 천일염에 함유된 불용분과 사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인체에 당장 어떤 해를 끼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미네랄 성분 등 품질면에서 국산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